

민주, '제3자 변제'에 "일본에 항복 선언...즉각 파기하라"

'강제동원 모임' 소속 의원 53명 기자회견문 발표 "피해자 절규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강력 규탄" "최악의 외교 참사...대일 협상서 韓 발목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

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53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추궁했다.

의원 모임은 "이번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

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효용' 조치는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의원 모임은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가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범기업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는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육보이는 기반이자 물타기용 핍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 결정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규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자가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하고 싶어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 전범기업과 피해자들 간 싸움이었던 앞

로는 정부와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최이슬 기자

민주,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3월 중 지정"

확대간부회의... "민생 법안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른바 '쌍특검'을 3월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확대간부회의에 대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3월 중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3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추진과 관련해 "그 외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 및 부의를 추진하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란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인사 문제 TF가 기자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 회의에서 "4월5일 재보궐 선거 관련 경남 창원군수 후보자로 성기호, 경남 창원 광역의원 후보자로 구성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인준했다"고 전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퇴 청원'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징계 요구 관련 청원에 대해 "오늘 그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헌 당규에 의하면 5만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오면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 그 부분은 조만간 보고, 이뤄지면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 사퇴 청원과 당헌상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사임 조건 예외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얘기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당원, 지지자

들의 체포 동의안 표결 관련 '색출' 움직임에 대해선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번 고위전략회의 직후 당 대표의 입장을 대변인 명의로 말씀을 좀 드렸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명단이 사실과 다르게 배포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당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 말씀"이라고 했다.

또 "잇그제 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당하는 심정, 제가 잘 알지 않나"라는 등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체포 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 가입자 수가 매일 평균 3800명 이상 늘었다고 소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2월27일 체포 동의안 부결 후 권리당원 입당이 계속 증가 중"이라며 "2월27일부터 3월5일까지 6일 간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오유니 기자

박홍근, "윤석열표 더 글로리 용납 안돼"

정순신 아들 학폭에 "피해자 망가뜨린 채 진학·승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피해자들의 삶과 꿈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만 진학, 승진의 불공정 사다리를 올라타는 윤석열표 더 글로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는 서울대, 그 아버지는 검찰 고위직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증 없이 임명되는 윤석열표 더 글로리"라고 말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 2명 중 하나는 대학 진학을 못했고, 다른 한 가족은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하지 못하고 전학 후 해외 이주를 해야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검사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위력이 피해 가족 모두를 괴롭히고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 학생과 가족이 2-3차 가해를 받는 동안 전 검사 가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탄탄대로를 걸어 온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런 현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사태 전말이 드러났건만 정부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감사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태도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는 처벌, 반성 없이 잘 살고 피해자는 계속된 고통만 강요되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태 관련 철저 수사를 촉구 하고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회 차원 조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정순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